
정책참고자료

2019-2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라!** _____ 4
정부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 행안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간 합동 점검 실시 -

2 국민권익위원회

-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_____ 10
디지털 정부가 온다
-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

3 중소벤처기업부

-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관·정 손잡다** _____ 16
- 사상 처음으로 선(先)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 -

4 교육부

-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개최** _____ 20
-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_____ 24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6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장관, 지속가능한 관광 위한 국제 공조 모색** _____ 31
- 10. 26. 일본 홋카이도, 제9차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 참석 -

7 농림축산식품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_____ 33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8 환경부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개최** _____ 35
- 7개국, 18개 전체 람사르 습지도시의 습지보전 활동 발표 및 습지도시 협의회 구성 등 협력 구축 -

9 고용노동부

앞서가는 기업의 근무혁신 비결은?

- (주)휴넷 도이치모터스(주), (주)대우루컴즈 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 39
-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10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에 성평등을 담는다

- 제1차 청소년정책토론회(포럼) 10월 17일(목) 개최 - ————— 44

1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 49

12 해양수산부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 ————— 54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라!

정부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 행안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48.1%에서 2016년 50.5%, 2018년 56.6%로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1%, 2016년 39.9%, 2018년 39.3%로 평균 40% 수준이었다.

※ 최근 5년간(2014~2018년) 보행 사망자 현황(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교통사고 사망자수(A)	4,762	4,621	4,292	4,185	3,781
전체 보행 중 사망자(B)	1,910	1,795	1,714	1,675	1,487
(B/A)	40.1%	38.8%	39.9%	40.0%	39.3%
노인 보행 중 사망자(C)	919	909	866	906	842
(C/B)	48.1%	50.6%	50.5%	54.1%	56.6%

-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7건 이상의 노인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일어났거나, 노인 보행자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전국 47개 지역을 우선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47개 지역에는 15건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부상당한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역 주변,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 등이 포함돼 있다.
- 점검단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진단,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여 현장별로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개선방안은 해당 지자체에 전달되며 연말까지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할 계획이다.
- 한편,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반경 200m 이내에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3건 이상이거나 사망사고가 2건 이상이었던 529개소 사고 2,156건을 분석한 결과, 병원과 시장, 대중교통시설 주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병원 주변이 654건(31%), 시장 주변 458건(21%), 역·터미널 주변 330건(15%), 경로당 등 노인시설 주변 304건(14%) 순이었다.
-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분석결과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시장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았다”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1

2018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처

□ (선정기준) 반경 200m내, 노인 보행사고* 3건 이상(사망사고 포함 시 2건 이상)

*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교통사고

□ (선정결과) 529개소

시 도		지점수	시 도		지점수
계			529		
8개 특별· 광역시	소 계	258	9개 도	소 계	271
	서울	116		경기	94
	부산	59		강원	15
	대구	29		충북	20
	인천	15		충남	24
	광주	20		전북	18
	대전	13		전남	26
	울산	5		경북	31
	세종	1		경남	36
				제주	7

□ 보행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상위 지역 현황

순위	시군구	발생지역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서면역 새싹로14번길 부근)	15	0	16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동서시장 부근)	15	0	15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청량리역 청량리우체국 부근)	13	1	12
3	부산광역시 중구1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신천지시장 부근)	11	0	11
3	전라남도 여수시1	전라남도 여수시 교동(조은한의원 부근)	11	0	11
3	경상남도 통영시1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동(롯데리아 통영점 부근)	11	0	11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반송주공아파트 정문 부근)	10	0	10
8	서울특별시 금천구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시흥사거리 부근)	9	2	7
9	서울특별시 종로구1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낙원지하상가 부근)	9	0	9
9	서울특별시 종로구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IBK기업은행 종로지점 부근)	9	0	9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홍은사거리 부근)	9	0	9
9	광주광역시 서구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화정동 대주피오레아파트 정문 부근)	9	0	9
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석교육거리 부근)	9	0	9
9	충청남도 당진시1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리(당진시장오거리 인근)	9	0	9

참고 2

현장점검 대상 현황

연번	지자체			지점명	2018년 사고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1	서울	중구	을지로5가	오장동사거리 부근	2	2	0
2	서울	용산구	문배동	원효빌딩 부근	3	2	2
3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서시장 부근	15	0	15
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역 청량리우체국 부근	13	1	12
5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2가	성북녹십자약국1호 부근	2	2	0
6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	9	2	7
7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신천지시장 부근	11	0	11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새싹로14번길 부근	15	0	16
9	부산	남구	용호동	조광빌로체아파트 부근	4	2	2
10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주공아파트 정문 부근	10	0	10
11	부산	연제구	연산동	김성규 내과의원 부근	2	2	0
12	대구	북구	태전동	태전중앙시장 부근	4	2	2
13	인천	연수구	동춘동	나래병원 부근	2	2	0
14	광주	서구	양동	양동시장역 부근	5	2	3
15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부근	5	2	3
16	광주	북구	우산동	광주은행 문화동지점 부근	4	2	2
17	광주	북구	유동	광주 북성중학교 정문 부근	2	2	0
18	대전	대덕구	송촌동	SK맘모스 주유소 부근	4	2	2
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삼거리 부근	8	0	8
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사거리 부근	8	0	8
21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탑라인의원 부근	8	0	8
22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 부근	7	0	7
23	경기	부천시	상동	솔안공원입구 부근	3	2	1
24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용한의원 부근	7	1	6

연번	지자체			지점명	2018년 사고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5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사거리 부근	3	2	1
26	경기	파주시	금촌동	메디인병원 부근	8	1	8
27	강원	강릉시	성남동	하나은행 강릉중앙지점 부근	7	0	7
28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석교육거리 부근	9	0	9
29	충북	제천시	중앙로1가	남천약국앞 교차로 부근	7	0	7
3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삼거리 부근	2	2	0
31	충남	아산시	온천동	관광호텔사거리 부근	8	0	8
32	충남	당진시	읍내리	당진시장오거리 부근	9	0	9
33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프라자 부근	7	0	7
34	전북	김제시	요촌동	전통시장사거리 부근	7	0	7
35	전남	목포시	보광동1가	목포광주약국 부근	2	2	0
36	전남	여수시	교동	조은한의원 부근	11	0	11
37	전남	순천시	동외동	성동오거리 부근	7	1	6
38	경북	포항시 북구	남빈동	데코라인가구 포항점 부근	5	2	3
39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동해약국 부근	3	2	1
40	경북	김천시	남산동	제일낙시 부근	7	0	7
41	경북	영주시	휴천동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부근	7	0	7
42	경북	영천시	완산동	영창빌딩 부근	7	0	7
4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동마산 새마을금고 본점 부근	4	2	2
44	경남	통영시	항남동	롯데리아 통영점 부근	11	0	11
45	경남	통영시	항남동	시민약국 부근	8	0	8
46	경남	통영시	문화동	통영문화관 부근	2	2	0
47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약국 부근	5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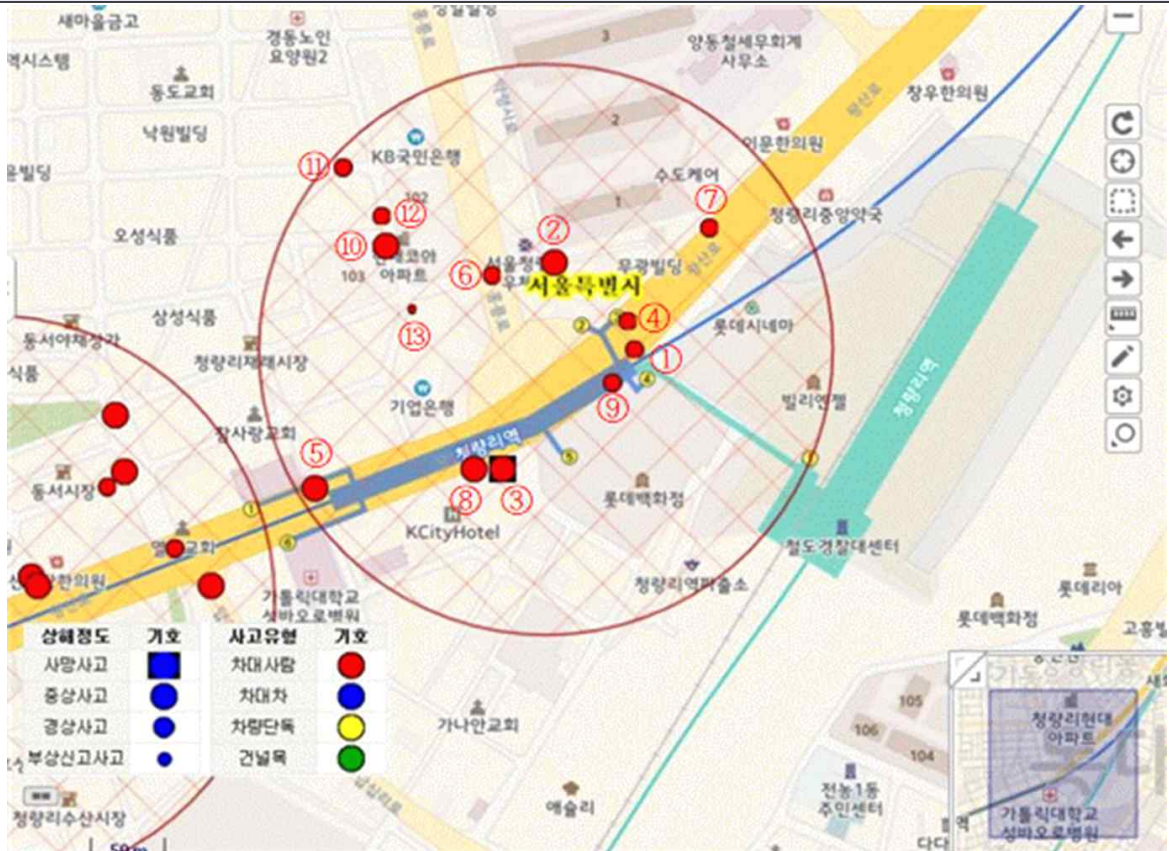
* 출처 : 도로교통공단, '18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역 529개소 중 발생건수 7건 이상(특별광역시 10건 이상),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역 47개소

※ 점검 대상지역(예시)

부산 부산진구 서면역 주변(사고 15건, 부상 16명)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주변(사고 13건, 사망 1명, 부상 12명)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속으로. 디지털 정부가 온다

-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 29일 국무회의서 발표 -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되는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서비스는 여전히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우리나라 IT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2000년 초반의 전자정부처럼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 과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추진 과제 】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 보조금, 세금 감면과 같이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 이를 위해,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를 손쉽게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 PC, 모바일은 물론,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대화형으로 서비스를 안내 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출산과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례 >

-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부처별 전국공통 서비스 7종 + 지자체별 서비스 3~10종)
- ⇒ '18년 기준 출산 가구의 99.4%가 이용(33.2만건)

-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칭복지멤버십’도 범정부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공

- 이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거래-대출-등기까지 자동화하는 부동산거래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전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 정부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로그인 체계도 추진한다.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종이증명서는 이제 그만

* 정보주체인 이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으로 금융(英), 의료(美) 분야에서 적용되어 오다가 최근 유럽연합(EU)이 데이터이동권으로 법제화·시행(‘18.5)

-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B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최소화한다.
- 나아가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에 맞게, 안전하게(위변조 방지, 유통이력 확인)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 올해 말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

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원하는 국민에게만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

- 이밖에 국세·지방세·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국민의 소리를 소중히!

- 전화 민원 중 다른 기관에 전화를 넘기는 경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국민신문고)에서 전화까지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미국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하여 시민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 그간의 통상적인 공모방식과 차별화하여, △공공부문의 도전적 문제 제시와 △파격적 보상과 지원, △확실한 정책 반영을 해나갈 계획이다.
- 또한, 디지털 기기활용이 어려운 국민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사무실 2PC가 사라진다

-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한다.
-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던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사무실은 물론 이동,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민간클라우드 기반의 가상PC를 이용하고, 개방형 운영체제(OS)를 도입한다.

- 또한, 모든 업무자료는 클라우드에서 작성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메신저, 영상회의 등 각종 협업도구도 개선하여 어디에서든 사무실과 같은 업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5.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 **용역개발에서 이용으로!**

-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내부시스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 기존에는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했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후 이용가능
-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 공공부문이 민간의 우수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도 도입한다.
- 이러한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토대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민간과 함께 혁신한다!**

- 그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하여,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타 시스템에서 제공 중인 데이터 또는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표준화된 방식으로 호출·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하는 것

- 기상·환경·교통·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측정·관측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개방하고,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철저한 익명화 조치를 거쳐 개방을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장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SW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요금 분쟁 차단 위해 민·관·정 손잡다

- 사상 처음으로 선[先]손해사정제도 시범 도입 -

그동안 자동차 보험정비는 정비업체가 정비를 진행한 이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비요금 감액·미지급·지연지급 등의 분쟁이 빈발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디가 어떻게 정비됐고 정비요금은 얼마인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 **더불어민주당**(대표 이 해찬),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각 당사자들을 대표해 박영선 장관, 김경욱 2차관, 김원이 정무부시장,

박정 의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장, 황인환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대표가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 소분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중기부는 자동차 보험정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선손해사정제도의 시범 도입과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양 업계와의 상생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국회에서는 책임의원인 박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의과정을 지원했다.

상생협약의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를 진행하는 ‘선손해사정’ 제도를 사상 처음으로 도입해 우선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운영한다.

전국적인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이번 협약에 의해 구성되는 상생협의회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한 내용 등을 신속히 설명하기로 했다.

또한,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를 시범도입하고, 그 동안 실제 서비스 대상이지만 고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업계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협의채널을 처음으로 구축하게 됐다”며 상생협의회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다른 분야에서도 제2, 제3의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을 위한 연결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 2019. 10. 17(목) 11:00~11:20, 당대표 회의실
- 협약기관 : 중기부(박영선 장관), 더불어민주당(박정 의원),
국토부(김경욱 2차관), 서울시(김원이 정무부시장),
손해보험협회(김용덕 회장),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전원식 회장),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황인환 이사장)
- 참석 : 이해찬 대표, 김남근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남인순 민생
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고용진 하도급
소분과 위원장

□ 협약 주요내용

- ① ‘先손해사정’ 시범운영 실시, ②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 주기적 재검토
프로세스 구축(온라인시스템 구축 포함), ③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

□ 세부 시간계획

순번	시간	내용	
1	11:00~11:02(2)	개회 및 소개	김남근 변호사(사회)
2	11:02~11:04(2)	인사말씀	이해찬 당대표
3	11:04~11:06(2)	경과보고	박정 의원
4	11:06~11:08(2)	감사말씀	장관
5	11:08~11:14(6)	협약당사자 인사말씀	국토부 2차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자동차정비업계 대표(2인) 손해보험협회 회장
6	11:14~11:17(3)	협약식	협약서 서명
7	11:17~11:20(3)	기념촬영	
8	11:20	협약식 종료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개최

-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 를 주제로 평생학습 우수사례 공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4일(월) 오후 2시 양재 aT센터에서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을 개최하였다.
-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사는,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2019년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지 공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 평생학습대상은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사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대상 1명, 우수상 5명(개인2, 사업3) 등 총 20명을 선정하였다.
- 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은평시민대학'은 은평구 내 28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역네트워크형 대안대학으로, 시민을 위한 학습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개인부문 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는 평생학습을 통해 보일러 분야의 전문가(2002년 대한민국 명장)가 되어 정년 후에도 사회활동에 참여한 '성광호'씨와 충주열린학교 운영 등 교육소외계층(문해자, 장애인 등)

에게 재능기부 활동을 한 '정진숙'씨가 선정되었다.

- 사업부문 우수상(교육부장관상)에는 충주시 평생학습관의 '자공공(自共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젝트', 경상북도 포항시의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강원도 횡성군의 '횡성소망이룸학교'가 선정되었다.

※ 대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3명, 특별상 11명 등 총 20명 수상 [붙임2 참조]

□ 이날 행사는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새롭게 지정된 7개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동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지역 학습공동체를 형성 하는 사업이다.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7개 도시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세종시, 경기 광주시/하남시,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이 선정되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끊임없는 도전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그 배움을 나누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평생교육을 통한 일상 속의 배움이 국민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 대한민국 평생 학습대전 개요

2. 제16회 대한민국 평생 학습대상 수상자 명단 1부.

□ 개 요

- 행사명 : 2019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전
- 주 제 : 평생학습, 삶의 가치를 더하다
- 일시/장소 : 10.14(월) 14:00~15:00 / 양재aT센터 5층 그랜드홀
- 주최/주관 :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일보 주관
- 내 용 : ❶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❷ 2019년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❸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순천) 공표 등
- 참석자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20명(개인/기관), 신규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박람회 주관 도시 관계자(전남 순천시) 등 300여명

* 서울 성동구, 부산 동래구, 세종시, 경기 광주시/하남시, 전북 고창군, 전남 해남군

□ 세부일정[안]

구분	시간	내용
식전공연	13:45 ~ 14:00	하트 시각장애인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
공식행사	14:00 ~ 14:10	개회사, 환영사
	14:10 ~ 14:35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
	14:35 ~ 14:50	2019년 평생학습도시 동판수여식
	14:50 ~ 15:00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공표
	15:00 ~	폐회

※ 상기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제16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명단

구분	훈격	시상 규모	상금 (만원)	수상자	기관
대상	국무총리상	1점	700	은평시민대학	서울특별시 은평구
우수상	교육부장관상	2점 (개인)	각300	성광호	-
				정진숙	-
		3점 (사업)	각500	자공공(自共公),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젝트	충주시 평생학습관
				마을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경상북도 포항시
				횡성소망이룸학교	강원도 횡성군
장려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장상	2점	-	지역기반 학습거버넌스 : 시흥형 평생학습네트워크	경기도 시흥시
			탈북학습자 생활정착지원 및 평생학습역량 강화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중앙일보사장상	1점	-	이유남	-
특별상	국회교육위원장상	2점	-	성인도 청소년도 함께하는 3up 멘토링 프로그램	고양송암고등학교
			-	이관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1점	-	오진상	-
	전국시·도평생교육 진흥원 협의회장상	1점	-	주민자치와 연계한 작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기도 이천시
	전국평생학습도시협 의회장상	1점	-	의왕학습레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고용정보원장상	1점	-	테크니션스쿨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교육개발원장상	1점	-	지역사회 수요조사와 환경분석으로 경영 개선	영등포 평생학습관
	한국교육방송공사장상	1점	-	세대공감 인생레시피 : 요리는 감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한국장학재단이사장상	1점	-	김복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상	1점	-	배움이 즐거운 학교! 누구에게나 열린 학교!	명인정보고등학교
	한국평생교육학회장상	1점	-	3 in 1 평생학습 패키지로 다시 뛰는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 특별상은 기관명 가나다 순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 '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 하는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일시	안건명
1 차 (9.19)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2 차 (10.10)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3 차 (10.17)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4 차 (10.31)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①스마트시티 ②VR·AR ③신재생 에너지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맞춤형헬스케어 ⑦지능형로봇 ⑧드론 ⑨차세대통신 ⑩첨단소재 ⑪지능형반도체 ⑫혁신신약 ⑬AI

-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습니다.

-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으며,
-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

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 (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 (비행방식) 사람이 직접 조종 →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조종 비행		→	자율 비행	
(개념)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임무위임	원격감독	완전자율
	사람이 직접 조종	고난도 임무만 사람이 직접 조종	사람 임무 부여 → 드론 자율비행	드론 자율비행, (필요시) 사람 개입	사람 개입 불요

○ (수송능력) 화물 적재 → 사람 탑승·운송으로 수송능력 발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화물 적재		→	사람 탑승	
(개념)	화물 10kg 이하 5km 미만	화물 50kg 이하 5~50km	2인승(200kg) 5~50km	4인승(400kg) 50~500km	10인승(1톤 이상) 500km 이상

○ (비행영역) 인구 희박지역 → 밀집지역 (가시권 → 비가시권)으로 확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발전양상	인구 희박지역	→	인구 밀집지역		
(개념)	비가시권 비도심 지역	가시권 도심지역	비가시권 도심지역 관제국 이용		전파 비가시권 도심 전파음영 지역

□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 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비행방식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자율비행(임무위임-원격감독)
수송능력	화물 10kg 이하	화물 50kg 이하	2인승(200kg) ~ 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 인프라 영역은 총 19개 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구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 ②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 카이스트 수행('15~'18), 김포공항('19.10~) 및 인천공항('20.6~) 시범운용 예정
- ** '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4년 실전배치 예정

③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④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에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4곳 :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④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문체부 장관, 지속가능한 관광 위한 국제 공조 모색

- 10. 26. 일본 홋카이도, 제9차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10월 26일(토)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제9차 주요 20개국(G20)*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다.

* 선진 7개국 정상회담과 유럽연합 의장국,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20개국(G20)과 초청국*의 관광장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등, 주요 국제관광기구 및 유관 기구 대표들이 ▲ 관광의 미래 일자리와 혁신, ▲ 지속 가능한 관광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 ▲ 방문객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관광 등, 세계 관광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스페인, 네덜란드, 필리핀,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베트남

박양우 장관은 지역 기반의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다문화 여성, 노인층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고려하는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한국 관광정책을 주요 20개국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20개국 관광장관들은 이번 9차 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관광의 기여 극대화, 여행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관광의 관리,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혁신 강화 및 디지털 전환 노력을 골자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선언문에 자연재해 혹은 인재 발생 시 대중에게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관광객 안전을 위한 주요 20개국 차원의 정책 공조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박양우 장관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과 러시아 관광청장, 사우디아라비아 관광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수매참여 농가 정책자금 상환연장 및 이자감면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 감면

- 대상자금 :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
- 지원내용 :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 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

- 지원대상 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내 살처분 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돼지 수매(또는 수매·도태)에 참여한 농가이다.

* 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질병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예방접종 명령,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요 지원대상 정책자금은 사료구매자금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이 해당된다.

- 지원내용은 살처분 명령일 또는 수매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만기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간 연장 및 그 기간의 이자감면

< 상환기간 연장대상 원금 및 이자감면액(추정) >

※ ASF 방역 강화 지역(5개 시·군)의 9월말 기준 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대상 원금은 1,095억원, 이자감면액은 49억원(1년 기준) 수준

-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금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안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한, 농·축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적용 등 피해복구자금 신규 지원 및 기존 대출금 상환 기한연장, 이자 납입유예 등을 지난 9월 2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하면서,

○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축협에서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개최

- 7개국, 18개 전체 람사르 습지도시의 습지보전 활동 발표 및 습지도시 협의회 구성 등 협력 구축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 순천시에서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7개국 18개 도시의 지자체장 및 습지도시 운영 위원회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창녕 등 4개 도시가 참여하여 습지도시 간 정보교류 등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 람사르 습지도시 : 우리나라(4개시, 창녕·인제·제주·순천), 중국(6개시, 창더시·창수시·동잉시·하얼빈시·하이코우시·인촨시), 프랑스(4개시, 아미엔시·캥터랑시·폰트-아우르시·세인트-오엘시), 헝가리(타타시), 마다가스카르(미신조시), 스리랑카(콜롬보시), 튀니지(갈엘멜시)
- 제13차 람사르 총회에서는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노력하고 있는 습지도시에 대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했다.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발의하고 채택된 제도다.
-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습지보전 정책 및 수단 마련, 지역사회 습지인식 증진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인증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2018년에 랍사르 습지도시 운영 지침서가 마련됐으며, 지속적인 습지보전 활동을 위하여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번 회의는 랍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은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18개 습지도시의 활동실적을 발표, 습지도시 간 협력방식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습지도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 주요활동으로 국내 4개 습지도시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 주도로 습지인식 증진사업(생태관찰, 습지 관찰, 습지식물 증식·재배 등)과 지역관리위원회(지역주민,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를 구성·운영했다.
- 그밖에 해외 습지도시에서도 습지 보전을 강조한 도시발전 목표 수립 및 습지관리 실천 계획(프로젝트) 진행(중국 창더시)과 생태 관광센터 설립 및 하천 습지 복원사업(헝가리 타타시)등을 추진했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랍사르 습지도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습지도시 상징물을 제작하여 지역 친환경농산물,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징물 개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는 제13차 총회에서 습지도시 인증을 기념하고, 상호간의 우호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이다.

* 람사르협약에서 공인한 전세계 4곳의 지역활동기관(아메리카, 중서부아시아, 동·동남·남아시아, 동아프리카) 중 하나로 2008년 창원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2009년 창녕에 최초 설립하였다가 2016년부터 순천에 유치하여 운영 중

-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외 습지도시들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처음으로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가 열림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채택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가 정착됐다”라며, “습지도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도 개요.
2. 람사르 습지도시 운영현황.

□ 람사르습지도시(Wetland City Accreditation of the Ramsar Convention)

-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에서 인증 받은 도시(람사르협약에서 인증)

※ 제48차 상임위('15.1)에서 한국·튀니지 공동 발의하여 제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15.6.9, 우루과이)에서 결의문으로 채택

◆ (참고) 람사르협약

-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 (약칭)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f Wetlands),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 우리나라는 '97년 3월에 101번째로 가입('97년 7월 발효). 우리나라는 인제 대암산용늪, 창녕 우포늪, 순천만 등 23개소를 람사르습지로 등록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기준

- ①람사르습지와 연계성(위치), ②습지 생태계서비스 보전방안, ③ 습지 복원·관리방안, ④습지 통합적 보전계획(토지·공간이용), ⑤ 습지 혜택·서비스 교육·홍보(습지교육센터 등 설치·운영), ⑥습지도시 관리, 인식증진 등을 위한 지역공동체(지역위원회) 구성·운영

□ 인증절차

- 당사국 인증신청서 제출(직전 총회 개최 후 1년 이내)→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결정→상임위 보고(총회 개최 직전 상임위원회 60일전)→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인증서 교부(람사르총회, 6년간 인증)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도입) 기대효과

- (대외) 제도 제안국으로서 국제 협약 선도적 이행, 국제사회 위상 강화
※ 람사르습지도시에 대한 협약 당사국들의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대내) 인증서·현판 수여, 람사르로고(브랜드) 독점 사용으로 친환경적 지역이미지 향상(지역상품 경쟁력 향상, 인증사업에 대한 국고 우선 지원 등)

□ 국내 람사르 습지도시 활동현황

지역	사진	활동내용
제주시 동백동산습지		•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주민 원탁회의 정례 운영 • 제주도 습지보전조례 제정 • 제주도 습지보전종합계획 수립 • 주민습지생태모니터링→습지생태도감 제작 • 꼬마 습지해설사 양성(선홍분교 협업) • 동백동산습지센터 운영(주민운영) • 중국 람사르습지도시인 하이커우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
인제군 대암산용늪		• 대암산 용늪 습지식물 재배를 통한 습지복원 참여 • 용늪마을자연생태학교 운영 • 용늪 람사르마을 소식 신문 발행 • 용늪 주민생태조사단 운영 • 마을단위 습지의 날 기념행사 • 마을단위 습지보전 규약 제정 • 인제군 관내습지 모니터링
창녕군 우포늪		• 주민 습지경관, 따오기 모니터링 • 청소년 습지기자단 운영 • 지역 어민이 주도하는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경작지 확대를 위한 논습지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및 정화활동 • 우포늪 자연미술제 개최

□ 기타 주요 람사르 습지도시 주요활동 현황

지역	사진	활동내용
중국 창더시		• 습지의 물이용 역할을 강조한 도시 발전 목표로 “스폰지 시티”채택 • 도시내 19만 헥타르 습지면적 중 13만 헥타르 보호지역으로 지정 • 세계자연기금(WWF)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체계적 습지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진행 • 창더 습지보전 및 관리 계획 • 시민 인식증진 정책 (습지학교, 습지자원 봉사 등) 도입
헝가리 타타시		• “Old Lake” 복원 및 생태관광 센터 설립 • 콘크리트 제방 자연화 • 43km 길이의 하천변 습지복원 • 도시 정책으로 환경교육 및 여가 활동에 습지활용

앞서가는 기업의 근무혁신 비결은?

- [주]휴넷, 도이치모터스(주), [주]대우루컴즈 등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에 참여하여 높은 성과를 거둔 「근무혁신 우수기업」 24개소를 발표했다.
- 근무혁신 우수기업에는 향후 3년간 우수기업 등급별(에스에스등급 6개소, 에스등급 9개소, 에이등급 9개소)로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대출금리 우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1차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자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3개월에 걸쳐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 1차 사업 공모(4.3.~4.30.)에는 4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행계획이 우수한 31개소를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근무혁신 실시
- * 2차 사업 공모(5.20.~6.14.)에는 총 77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46개 기업이 선정되어 참여 중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

- (참여 대상) 중소·중견기업
- (평가항목)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및 문화
- (평가등급) 에스에스(SS), 에스(S), 에이(A) 등 3등급으로 구분
- (혜택)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리 우대, 일터 혁신 컨설팅 등 정부 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누리집 홍보, 우수기업 표지(마크) 부여 등

-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 정량·정성 평가 결과에 노동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선정됐다.

-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총점에 따라 에스에스(SS), 에스(S), 에이(A)의 3등급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 근무혁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참여기업의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근무혁신 이행 기간 종료 후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 또한 전문 조사업체가 참여기업 소속 노동자의 근무혁신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동자가 체감하는 근무혁신 정도를 평가점수에 반영했다.

< 근무혁신 우수기업 명단(2019년 1차) >

등급	기업명	소재지	등급	기업명	소재지
에스 에스 (SS)	(주)넥스트랩	서울 서초구	에스 (S)	(주)지엔텔	서울 금천구
	(주)대우루컴즈	경기 용인시		풍원화학(주)	경기 안산시
	도이치모터스(주)	서울 성동구		헨켈코리아(유)	충남 천안시
	잡코리아(유)	서울 서초구	에이 (A)	관세법인에이원	서울 강남구
	제논전장(주)	전북 전주시		농업회사법인(주)해드림푸드	경남 김해시
	(주)휴넷	서울 구로구		(주)씨디에스	강원 춘천시
에스 (S)	(주)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서울 영등포구		(주)에몬스가구	인천 남동구
	바로선병원	서울 도봉구		(주)에이텍	경기 성남시
	(주)센트랄	경남 창원시		(주)엘아이씨티	경기 수원시
	엘라인	경북 구미시		좋은아침병원	경기 구리시
	(주)웹젠	경기 성남시		(주)트렉스타	부산 강서구
	(주)이너트론	인천 연수구		(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 이번에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들은 근무혁신을 위한 고용 문화 조성, 제도화 및 인사조직 관리 혁신 등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1>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전사적으로 정시 퇴근, 휴가 활성화, 건전한 회식 문화 조성 등 '인식개선 운동(캠페인)'을 추진했다.

-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는 (주)지엔텔은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112회의', '1장 보고', '119회의' 등을 포함하는 「새롭게 일하는 지엔텔(GNTEL)」 설명서를 배포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웹젠은 월별 및 분기별 연가 사용률 공개 등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심회식, 문화회식, '5.3.2회식'(5시부터 3시간 이내, 술잔은 반만 채우기) 등 회식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 접착제 제조업을 하는 헨켈코리아(유)는 최고 경영진이 정시 퇴근 및 연차휴가 100% 사용 서약을 하고 술선수범하고 있으며 휴가 사유 묻지 않기, 점심회식 활성화 등의 고용 문화 개선 운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 유연근무제, 집중근무제, 컴퓨터 자동 종료제(PC-OFF) 등 새로운 고용 문화의 '제도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지속적 변화를 이끌었다.

-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도이치모터스(주)는 시차출퇴근제(사무직 대상), 선택근무제(영업직 대상)를 실시하여 근무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시 퇴근 관리 강화를 위해 컴퓨터 자동 종료제(PC- OFF), 사무실 조명 자동 꺼짐 등을 시행하고 자체 근무혁신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도이치워크 챌린지 2020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센트랄은 ‘스마트 퓨처 프로그램(SMART FUTURE PROGRAM)’을 기획하여 유연근무제 운영, 초과근로 감축 등 전사적인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 좌석제, ‘리더 스테이션’ 제도(각 조직의 부서장이 하나의 공간에서 근무)를 도입하여 업무 공간 변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하는 (주)이너트론은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집중근무시간제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높였고 매주 수·금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첨단 정보통신 기술, 조직관리 기법 등을 활용하여 생산공정 개선, 협업 강화 및 평가체계 개편 등 ‘조직 및 업무처리 방식 전반에 대한 혁신’을 시도했다.

-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 (주)휴넷은 단순 작업에 로보틱프로세스 자동화(RPA)*를 도입하고 새로운 공동 작업 전산망과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을 추진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구매, 재고 등 활동 과정을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하는 프로그램

- 컴퓨터 제조업을 하는 (주)대우루컴즈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을 도입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고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임금체계 및 성과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주문부터 생산까지 제조 현장의 각종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점검(모니터링), 분석, 제어, 추적관리 등을 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주)넥스트랩은 협업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의 주제 공유 및 사내 쟁점사항 공지 등 회의시스템을 개선했고, 목재가구 제조업을 하는 (주)에몬스가구는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 전자 결재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한편 현재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6개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등을 거쳐 11월중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만큼 기업 경쟁력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성평등을 담는다

- 제1차 청소년정책토론회(포럼) 10월 17일(목)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0월 17일(목) 오전,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평등 인식제고 방안 모색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포럼)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남녀 청소년 간 성평등 인식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한 의식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 성별 고정관념 등에 성별 간 인식 차이 존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년 청소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그렇다) : 여학생 5.2% / 남학생 13.8%
-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그렇다) : 여학생 61.8% / 남학생 43.3%

- 토론회(포럼)에서는 조연숙 ‘젠더와 정책연구소’ 소장이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과 성평등한 청소년 프로그램 필요성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김애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사는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청소년대표로 참석한 이다인 고등학생과 김현수 대학생은 청소년이 체감하는 성평등 인식과 청소년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청소년지도자로 참석한 하태호 지도사, 장문희 상담사는 **청소년프로그램 개선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한다.

-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김래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은 연구 및 사업수행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토론회(포럼)** 결과를 토대로 ▲ **청소년을 위한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성인지 교육 내실화**,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요소 점점 강화** 등을 보완해 향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지난해 8월과 올해 10월 각각 지정된 ‘젠더담당관’을 통해 성평등 사업이 보다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여성가족부 향후 추진계획 >

◇ (교육 콘텐츠 제작)

- 청소년 교육용 영상 콘텐츠를 제작,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등 배포
- ※ 일상과 청소년프로그램 속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구성
-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지도자 성인지 교육자료 개발 등

◇ (청소년지도자 인식 개선)

- 청소년활동진흥원 젠더담당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 성평등 교육 강화(성평등 교육과정(1h) 별도 실시)
- 청소년상담사 ‘양성평등 보수교육’과정 이러닝 과정 신설 및 집합교육 확대

◇ (청소년프로그램 점검)

-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프로그램 성인지 측면 전문가 감수
-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시 성인지 감수성 점검 의무화
-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 적합한 성인지 확인 요소 개발

□ 이번 토론회(포럼)는 저출산·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이어가기 토론회(릴레이 포럼)’의 일환으로,

-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청소년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계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이며,
-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 과정에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켜 청소년 주도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차적으로 청소년정책 토론회는 내년 3월까지 ▲ 청소년 자해·자살 방지를 위한 고위험 청소년 지원방안,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방안, ▲ 청소년 주도적 정책 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 약 1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김희경 차관은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이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로 올바른 성평등 의식과 인권존중의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화의 주역인 청소년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소년 프로그램 성평등 인식제고 포럼 개요
2.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 개요

□ 개 요

- (목적) 청소년정책포럼(청소년 프로그램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방안)
- (일시) '19.10.17(목) 10:40 ~ 12:30
-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서울 영등포구)
- (주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 주최
- (참석)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청소년관련시설 관계자 등 150명 내외

□ 내 용

-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현황 및 성평등 교육 필요성 발표
- 청소년 프로그램 성평등 인식 제고 방안 토론
 - * 청소년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지도자의 인식 제고 방안 등 여가부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

□ 세부 일정(안)

일시	세부일정	비고
10:40 ~ 10:45 ('5)	○ 개회	사회자
10:45 ~ 10:50 ('5)	○ 인사말	여성가족부 차관
10:50 ~ 11:20('30)	○ 발표 1 : 조연숙(젠더와 정책연구소 소장) -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현황 ○ 발표 2 : 김애라(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박사) - 청소년의 성평등 교육,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11:20 ~ 12:10('50)	○ 이다인(여, 고등학생), 김현수(남, 대학생) ○ 하태호(상록청소년수련관 지도사) ○ 장문희(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상담사) ○ 최윤정(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민정(청소년활동진흥원 부장) ○ 김래선(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 장석준(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좌장
12:10 ~ 12:30 ('20)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렴	
12:30 ~	○ 마무리	

추진 배경

- 저출산·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 범청소년계가 함께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주요 이슈별 릴레이포럼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 정책연계 및 적기 대응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이 과정에 청소년을 적극 참여시켜 청소년 주도적 정책 추진

포럼 개요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공동 주최
- (일정) '19.10월 ~ '20.3월 / 약 14회 개최
- (구성) 청소년활동, 복지·보호, 참여의 3개 주제로 분류·운영

- ◆ (청소년활동) 청소년의 변화하는 눈높이에 맞는 활동 환경 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
- ◆ (청소년 보호·복지)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강화, 신종유해환경에 적극 대응 등
- ◆ (청소년참여)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되는 정책 마련

- (형식) 발제 및 전문가 토론 형식으로 진행(* 주제에 따라 변동 가능)
- (정책제언) 토론·발제자 및 참석자들의 새로운 정책 제언

구분	주요 내용	일정(예정)
청소년 활동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성평등 인식 제고 방안	'19.10.17(목)
	■ 청소년 친화적 공간조성 및 환경 개선	'19.12월
	■ 학교 내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19.12월
	■ 청소년활동정책 제도개선 추진방향	'19.12월
	■ 디지털시대의 청소년활동환경 조성 방향	'20.1월
	■ 청소년 자생적 단체·동아리 활동지원	'20.3월
	■ 청소년의 문화감수성을 반영하는 활동 프로그램 연계방안	'20.3월
청소년 보호·복지	■ 청소년 자해 및 자살방지 방안	'19.10월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방안	'19.11월
	■ 후기청소년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19.11월
	■ 랜덤채팅앱과 청소년 보호 방안	'19.11월
	■ 신종유해환경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보호체계 개선방안	'19.12월
청소년 참여	■ 학교 밖 청소년 취업 등 자립지원 방안	'20.1월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19.11월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여 '19.10.29.(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 운항증명(AOC)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 운항증명(AOC) 검사 추진개요 >

- (검사기간) 2019. 4. 23. ~ 10. 29. (약 6개월)
- (검사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등 7명), 운항자격심사관(1명), 항공보안(1명) 등 총 12명
- (검사절차) ① 신청 접수 및 예비평가 → ② 서류검사 → ③ 현장검사 → ④ 운항증명서 발급
- (검사내용) 국가기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여부 검사

-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19.4.23.(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을 실시하였다.
-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고,

-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 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별도 지정하여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 이다.

-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하고,
- 또한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운항증명(AOC) 발급후 절차 : 운항하려는 노선별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운항개시(운항계획 : 양양/제주 일2회, '19.11)

□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개요

- 항공사의 조직.인력.장비.시설, 운항관리.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검사, 국제.국내기준에 적합 시 **운항증명(증명서)과 운영기준(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발급**(안전면허에 해당)

* (국제기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권(항공기운항) 4.2.1항(the Air Operator Certificate)

** (국내기준) 항공법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훈령)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예비평가 → ③ 서류검사
④ 현장검사 → ⑤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 교부

※ 신청서 접수 前 준비사항 설명 및 추진일정 **사전협의** 필요(약 1개월)

- (소요기간) 90일(항공법상 민원처리기간, 공휴일 제외 15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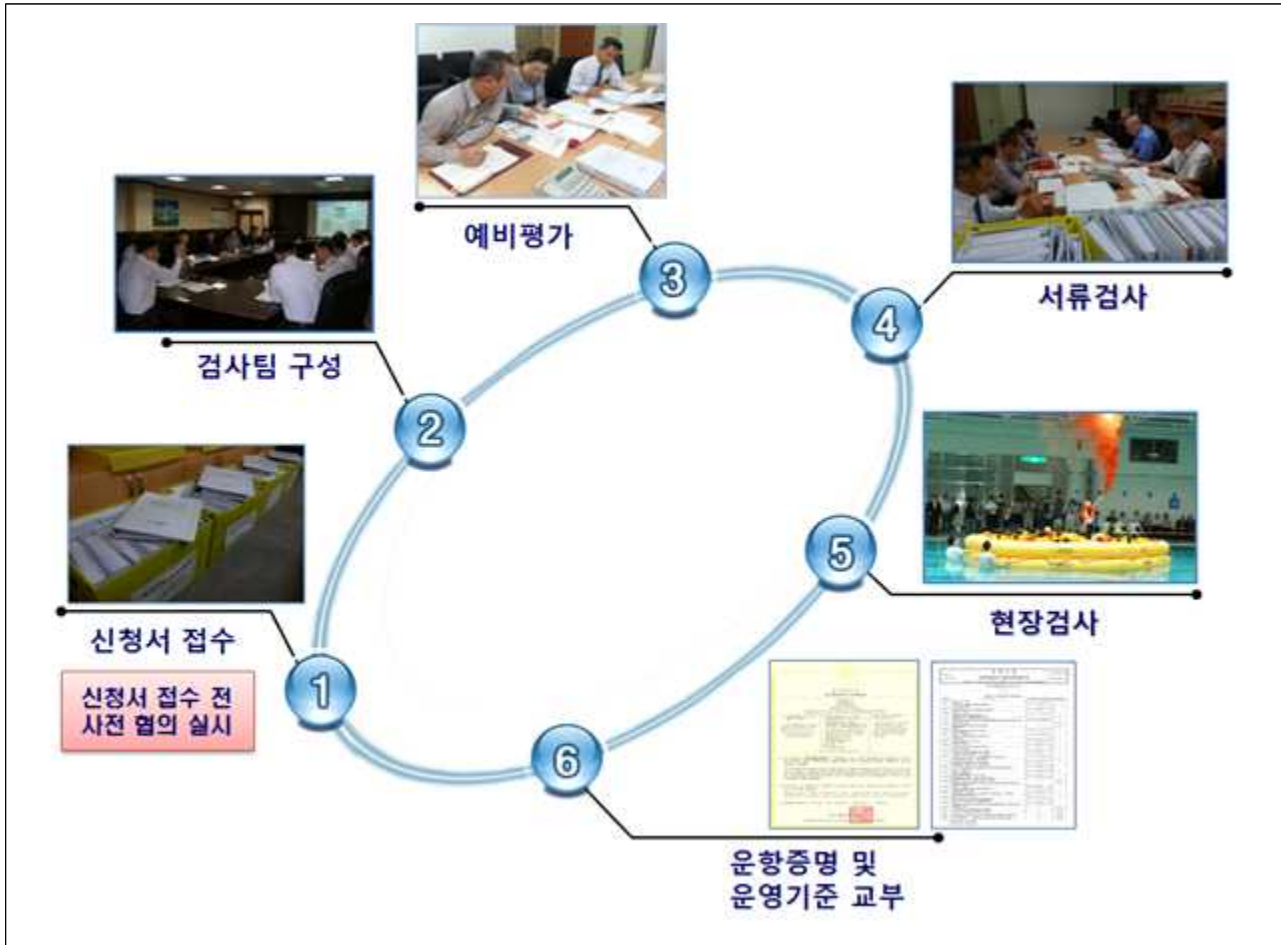
□ 주요 검사항목(85개 체크리스트, 3,805개 검사항목)

서류검사(2개월 소요)	현장검사(1개월 소요)
①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②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③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증명서류 ④ 항공기, 운항·정비시설 계약·임차서류 ⑤ 종사자 훈련교과목 운영계획 ⑥ 운항·정비규정(운항일반교범, 항공기 운영교범,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 훈련교범, 항공기성능교범, 노선지침서, 비상탈출절차교범, 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탑재·처리교범, 객실승무원 업무교범, 비행교범, 지속감항정비 프로그램,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⑦ 승객 브리핑카드 ⑧ 급유·재급유·배유절차 ⑨ 비상구열 좌석 배정절차 ⑩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 절차 ⑪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⑫ 비상탈출 시현계획 ⑬ 항공기 운항검사 계획서 ⑭ 환경영향평가서 ⑮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⑯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계약·임차서류	①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②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③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④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⑤ 훈련프로그램 평가 ⑥ 비상탈출 시현 ⑦ 비상착수 시현 ⑧ 기록 유지·관리 검사 ⑨ 항공기 운항검사 ⑩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⑪ 항공기 적합성 검사 ⑫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참고2

운항증명(AOC) 절차

□ 운항증명 전체 프로세스



① 사전 협의



■ 목적 : 신청전 사전 협의 및 관련 정보 제공

■ 신청자 준비사항

- ✓ 인가 받고자 하는 운항 유형/특성
- ✓ 신청서류 준비상태

■ 본부(또는 지방항공청) 준비사항

- ✓ 검사와 관련한 제출서류 목록
- ✓ 운항의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 견본
- ✓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공

국제항공운송사업자 ▶ 본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지방항공청

② 운항증명 신청서 접수 및 예비평가



③ 서류검사



④ 현장검사



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2019. 1. 1.~10. 9.)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며,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